

정운천, “새만금 국제공항 꼭 필요”

“입주 기업 항공물류 소화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동북아발전특위 구성도 추진

도내 정치권에 새만금 신공항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전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전북출신 의원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도 새만금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나섰다.

4일 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광역도시 간 경쟁이 아닌 전북도 안에서 부지가 선정되는 만큼 지역 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결정하면 된다”며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가 조성되고, 도레이·솔베이·OCI 등 국제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항공물류를 소화하기 위한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전북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발족돼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고 있고, 새만금 SOC기반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조성돼 있다”면서 “새만금의 향후 성패는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의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 달려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의 전북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새만금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하는 서진(西進)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5~20여명의 국외인력이 참여하는 ‘동북아발전특위’를 구성해 새만금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가 조성되고, 도레이·솔베이·OCI 등 국제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항공물류를 소화하기 위한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은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 약속이기도 하지만 전북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전북 민심이 중요하다고 판단, 해당 지역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이번 발언

을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새만금 신공항을 지지하는 전북과 광주 공황 확장을 비롯해 무안 공항의 재건을 원하는 전남 간 의견이 달라 제2의 영남권 신공항 사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제5차 공항개발중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공항 건설이 포함될 정도로 현안사업인만큼 정 의원이 정치논리

로 접근한 것만이 아니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신공항건설은 수십조 원이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결국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만 되는 사업이다.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만큼 행정 역시 수요 예측 등 정확한 경제논리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신광명 기자

국민의당 도당 “송하진 도지사 항공대대 이전 문제 해결 나서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항공대대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도지사는 도정을 총괄하고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책임자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송 지사가 항공대대 이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도지사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또 “서로 연대하며 갈바닥에 앉아 항공대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전주임실경제인산 시민들에게 이번 불개입 발언은 큰 실망감을 주었을 것이다”면서 “송 지사는 항공대대 갈등 불개입 발언을 취소하고 전북도정에 무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전주임실경제인산 등 관계지역 시장 군수들과 심도있게 대화하고 협의해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신광명 기자

김종인 ‘대기업 견제강화 법안’ 발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감사 분리 선임,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총 1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7명,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정동영·전정배 의원 등 10명이 합류했고, 정의당 심상정·노회찬 의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모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또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송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회사가 채소 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

전대 룰·백서 논란 등 계속 코너 몰리는 친박계

단일화·당권 도전·지도체제 등 내부에서도 이견 속출

새누리당 최대 계파인 친박계가 4일 전 당대회를 한 달 여 앞두고 계속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가뜰이나 공천을 주도한 친박계에 대한 시선이 뜨겁게 달아나고 있다. 이후 벌어지는 양상도 친박계에는 그리 유리하지 않는 구도로 흐르고 있다.

친박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당권의 행배다. 친박계 후보로 최경환 의원이 뽑히고 있지만 출마를 주저하고 있고, 비박계의 단일 후보 가능성에 비해 친박계는 복수의 후보가 나올 태세다.

친박계가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법박계 5선 이주영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또 이정현 의원도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의 단일 후보 응원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에 휩싸여 있어 이도 역시 박근혜 대

통령과 친박계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도 총선 책임을 규명하는 백서에는 친박계의 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친박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이 때문에 친박계는 당권 확보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선거구도상 1인2표제이자 집단지도체제 유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자 전당대회의 물줄기를 과거처럼 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일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단일지도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친박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6일 의원총회 후 결정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러나 친박계 내부에서도 단일지도체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마저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주영 의원은 비

대위가 합의한 대로 단일지도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조친박’ 한선교 의원 역시 비대위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가 결정한 물줄기를 또 한차례 비뚤다는 여론도 부담이다. 친박계는 지난 5월 비박계 위주 비대위-혁신위원장 인선 추진 예정이었던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무소속 복당 문제로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을 사퇴시킨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총선 백서 발간 시점을 두고도 친박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백서에 총선 참패의 주원인으로 친박계 책임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박계 입장에서는 전대 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박계는 백서 발간을 최대한 앞당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외적 요인이 친박계에는 부담스런 상황인데도 정작 내부의 의견 통일이 안되는 게 더 고민거리다. /뉴스

20대 총선 2030세대 투표율 크게 증가

20대 총선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대 총선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30대 투표율이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대 전반 45.4%→55.3% ▲20대 후반 37.9%→49.8% ▲30대 전반 41.8%→48.9% 등이다. 반면 50대 투표율은 19대 총선(62.4%)에 비해 소폭 감소한 60.8%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50대부터 70대까지는 전체 투표율보다 높았으나, 40대 이하와 80세 이상은 전체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중 70대 투표율이 73.3%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이 48.3%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선거인수 비율은 40대(21.0%)가 가장 높고, 50대(19.8%)가 그 다음이었으나, 연령대별 투표자수 비율은 50대(20.8%), 40대(19.6%) 순으로 높았다. 50대부터 70대까지는 선거인수 비율보다 투표자수 비율이 더 높아 중·노년층이 투표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투표율에서는 남성이 58.8%의 투표율로 여성(57.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19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여성의 투표율 증가폭(53.1%→57.4%, 4.3%p)이 남성의 투표율 증가폭(55.7%→58.8%, 3.1%p)보다 컸다.

지역별로는 시도별 투표율의 경우 광역시 이상 8개 도시(58.1%)와 9개 도지역(58.0%)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세종(63.5%), 광주(61.6%), 서울(59.8%) 순으로 높았고, 대구(54.8%) 부산(55.4%), 인천(55.6%) 순으로 낮았다. 도지역에서는 전남(63.7%)과 전북(62.9%)이 높았고, 경북(56.7%)과 충남(55.5%)이 낮았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경남(57.2%→57.0%)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투표율이 증가했다. 특히 광주(52.7%→61.6%), 전북(53.6%→62.9%), 전남(56.7%→63.7%), 경기(52.6%→57.5%)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했다.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12.2%로 남성(14.7%)이 여성

선관위, 투표율 분석결과 발표 중·노년층 투표에 더 적극적

(9.7%) 보다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19세(18.1%)와 20대(17.9%)가 가장 높았고, 30대부터는 60대(13.3%)를 제외하고는 연령대에서 전체 사전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뉴스

김종인 “더민주, 도덕적으로 변화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4일 자당 서영교 의원을 계기로 불거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우리는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정당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장해야 국민의 신뢰가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여러 면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김제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나병문 의원 ‘나이순’ 진땀숨

제7대 김제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재선의 나병문 의원(국민의당, 마선거구)이 ‘나이순’으로 진땀숨을 거두며 기세를 끌어내렸다.

또 부의장 역시 2차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김복남 의원(국민의당, 가선거구)이 선출됐다.

김제시의회는 4일 제200회 임시회를 열고 의회직을 선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재직의원 14명 모두가 참석했고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제시의회도 다른 시군의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구성이 관심을 끌었다.

사전에 후보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출 당일 의원들이 각각 이름을 적어내는 선출방식인 일명 교황식으로 진행됐다.

1차 투표함을 열어보니 정성주 의원(국민의당, 마선거구)과 온주현 의원(국민의당, 나선거구)이 각각 7표씩을 얻어 2차로 이어졌다.

2차에서는 나병문 의원과 온주현 의원이 맞붙었다. 또 다시 동표.

최종 3차에서는 판가름날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나 동표를 얻어 팽팽한 대결 양상을 펼쳤다.

특히 1차, 2차, 3차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온 의원이 막판에서 승리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나이순에 밀렸다.

온 의원은 1949년생 67세로 나 의원과 나이가 같았지만 온 의원은 7월생인 반면에 나 신임의장은 2월생으로 아쉽게 패했다.

부의장 선거도 관심을 끌었다.

김복남 의원(국민의당, 가선거구)과 서백현 의원(국민의당, 나선거구)은 1차 선거에서 동표를 얻었고 이어진 2차에서는 13대 1로 김 의원이 여유있게 서 의원을 따돌렸다.

이날 신임 나병문 의장은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의회장 선거에서는 박두기 의원이 운영위원장, 김윤진 의원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원이 안전개발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신광명 기자, 김제=곽노태 기자

국민의당 보좌진 가족채용 변명 일관

국민의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관해 여야 양당을 싸잡아 비난해놓고 정작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족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눈총을 사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속 의원 전원이 친인척 보좌진을 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을 향해서는 “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불과 수일 후 국민의당에도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졌다. 정동영 의원은 부인 7촌 조카를, 송기석 의원은 형수의 동생을 채용한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친인척 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낮은 주장은, 또 조배숙 의원이 5촌 조카를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에서의 친인척 채용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선 친인척 채용이 파악되지 않았고 만약 있다면 자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었다”며 “조 의원은 그런 경우(지역구 사무실 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가 아닌 지역 사무실이냐가 큰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정동영 의원은 처 7촌 조카에 이어 자신의 7촌 조카도 운영을 겸임하는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당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해명하려다보니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 사건으로 인해 가뜰이나 국민적 비판에 놓인 상태에서 또다시 자기 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다’란 식으로 치부하는 것을 두고 “이게 새정치야”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5촌 조카 채용 사실이 확인된 조 의원에 대해서는 자체 면직처리 외엔 따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이며,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직접 서영교 의원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덮기 급급한 국민의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김수민 사태로 이미 창당 이래 최대 악재를 겪었다. 아울러 안철수·전정배 전 공동대표가 동반사퇴하고 창당 150일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등 악재에 맞서 당 쇄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용 쇄신에 나선 상황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관해 ‘남의 당’은 비판하면서 ‘우리 당’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정작 당 지도부만 모르 는 것 같다. /뉴스